

보육시설 퇴소 앞둔 만 18세 청소년이 원하는 미래는?

“독립적 생활 통해 홀로서기 해야죠”

“이제 주위의 도움 없이 자립해보고 싶어요.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월세야 뭐 해서든 마련하면 되고 10년 넘게 보육원에서 지내왔는데 이제 혼자서 해봐야죠.”

내년 2월이면 아동보육시설에서 퇴소해 이른바 ‘보호종료 아동’이 되는 A(18)군은 부동산 어플을 통해 마음에 드는 원룸 찾기에 여념이 없다.

광주의 한 아동보육시설에서 10년 넘게 생활해 온 A군은 지금까지는 보육원이 집이었다. 그러나 내년 2월이면 사회로 나가 자립해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불안감 보단 ‘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A군은 “형, 동생들 40여 명과 10년 넘게 부대끼며 살아왔어요. 규율이 있는 단체생활보다 돈이 들더라도 성인이 된 만큼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만 18세 이후 아동보육시설을 나서는 청소년들은 ‘경제적 실리’보다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자유로움과 스스로의 선택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특징을 보이는 이른바 MZ세대(밀레니엄+Z세대, 1980년~2000년대 초반 생들)의 성향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진 보육시설 청소년들에게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만 18세가 넘어 보호종료가 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은 주거와 경제적 부분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이같은 지원 정책에 크게 의지하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시설 쾌적한 지원센터도 좋지만 이젠 주위 도움없이 자립해야죠” 월세 부담에도 원룸 찾기 나서 보육원 출신 시선도 항상 부담 MZ세대 특성 고려한 정책 필요

원하는 것은 보호시설과 단체시설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한 굵지 않은 사회적 시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월 3만원만 내면 2년간 헬스장과 북카페 등이 딸린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희망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적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주시 서구 상촌동에 아동자립지원 전담 기관인 희망디딤돌 광주센터가 문을 열었다. 희망디딤돌 광주센터는 아동보육시설에서 퇴소한 만 18세부터 만 25세 미만 원생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월 3만원 정도의 공과금만 지불하면 침대와 세탁기, 냉장고 등이 갖춰진 1인 1실 형태의 주거공간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희망디딤돌 광주센터는 27개 방 가운데 7개 만이 차있는 상태다.

물론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일반적으로 2월께 보호 종료 퇴소가 집중돼 아직 공실이 많다는 게 센터 관계자 설명이지만, 헬스장에 북카페·커뮤니티 공간 등 거의 모든 휴게시설을 갖추고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아동보육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센터 투어에서 아이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만 해도 광주에서 보호종료 청소년이 86명이나 되지만 센터에 입주한 이는 7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센터 투어를 다녀왔다는 아동보육시설 입소자 B군은 “시설은 정말 좋았다. 그러나 생활이 자유롭긴 해도 기숙사 형식의 주거 공간이라 큰 매력을 느끼진 못했다. 보육원 아이들은 평생 보육원 아이라는 주변의 시선을 받아왔는데, 이곳에 입주하면 또 그러한 시선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한 아동보육시설 심리상담사는 “집단생활만 해온 아동보육시설 아이들은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동경이 크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 자립하는 데에 있어 특별히 돈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걸 추구하려는 MZ세대의 경향이 짙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호종료 아동 지원과 관련해 MZ세대 등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고려해 볼만 한 시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정서 조선기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시대적 변화에 따른 MZ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아동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주거 및 교육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고, 스티그마(흔적)를 갖지 않도록 독립된 주거공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경찰 총기 사용 여론 높지만 실전교육 먼저”

‘인천 흥기난동’ 계기 특별교육·테이저건 훈련 계획 속 우려도

최근 인천 흥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1·2년 차 경찰 1만 620명과 일선 경찰관 7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테이저건 사용훈련에 나선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통과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실전 현장교육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불특정 다수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더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지난11일 기간 전국 3만 8551명이 참가한 인천흥기난동 경찰 대응 논란 설문조사 결과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 권한을 좀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한 응답자가 62.29%(2만 4012명)에 달했다.

이들은 치안유지를 위해 진압시 경찰에게 강력한 권한과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과잉진압

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이 된다며 ‘경찰의 총기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인원은 8413명으로 21.82%(8413명),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설문자는 15.9%(6125명)이었다.

설문 참여자 절반이 넘는 시민들이 경찰의 적극적인 총기사용에 찬성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교육 훈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별편성된 교육훈련이 유용하겠지만, 기존의 강당집결식 관공교육이라면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대해서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대응력 향상을 위해 공포복을 고려한 실질적인 훈련을 개발·시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골프 접대 받은 순천시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법원이 보조사업자로부터 각종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경위와 규모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2018년 12월 사이 순천시일

자리 창출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자리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보조사업 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4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관계자들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각종 금품을 챙기고, 수차례 골프·식사 접대를 받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

A씨는 일자리 정책 바람직 행사시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 직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오늘은 맘껏 노는 날” 장애인 체육복지의 시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일 오전 광주시 서구 풍암동 광주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명랑운동회의 ‘체험형 장애인 스포츠버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공굴리기 게임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환경미화원 채용시켜 줄게” 금품 챙긴 40대 징역형 선고

나주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금품을 챙긴 40대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B씨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며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 집행을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됐고 수수한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디지털성범죄 대응·피해자 지원 ‘지역특화상담소 내년 10곳으로

여성가족부가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광주를 포함해 10곳으로 확대·운영한다.

여가부는 올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7개 시도 가운데 경남·경북·대구·부산·전북·제주 등 6곳을 재선정했고, 광주·대전·인천·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9일까지 특화상담소를 통한 상담·삭제지원·연계 등 피해지원 건수는 총 6703건에 달한다.

이중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건수는 218건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10~20대가 많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대상으로도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 지원 효과성을 높였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